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		
담당	<총괄>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
	지역 지원대책	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윤현주, 사무관 조성래 (044-200-2211, 2212)
		산자부 지역경제진흥과	과장 정경록, 사무관 염현호 (044-203-4420, 4422)
	전력수급 상황점검	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이민영, 전문위원 최수혁 (044-200-2216, 2219)
		산자부 전력산업과	과장 최우석, 사무관 권용균 (044-203-5240, 5254)
	소상공인 지원	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김성규, 사무관 한태경 (044-200-2221, 2217)
		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	과장 조재연, 서기관 류선미 (042-481-4408, 4564)

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<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>

- ▶ 위기지역 지정 후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
- ▶ 특별보증한도 확대(3억원→5억원), 지원자금 금리인하(2.8%→2%) 등 추가대책 시행
- ▶ 체계적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

<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>

- ▶ 8월 피크 대비 167만KW 확충, 출력상향 등을 통해 681만KW 추가자원 확보
- ▶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 T/F 운영 등 전력수급 전망에 대한 신뢰도 제고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」 과 「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」 을 심의·확정하고, 「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」 을 논의했습니다.

- * (참석) 법무부·복지부·고용부·해수부·중기부 장관, 권익위원장, 통계청·기상청장, 기재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 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금융위 사무처장, 인사처 차장 등

◆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(산업부)

- 정부는 산업·고용위기지역 지정(1차: 3.8, 2차: 4.5) 및 지원대책(5.29) 마련 이후 추진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,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- 지역 지원대책 집행실적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(자금지원) 대출 만기(7,238억원)를 연장하고 특별보증(1,021억원), 융자(953억원)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, 중소 조선사 RG 발급('17년 272억원 → '18.상반기 438억원) 확대를 지원했습니다.
 - (경영부담 완화) 국세·지방세 징수·체납처분 유예(2년)하고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완료(1년)하였으며, 세제·입지·투자 패키지 제도개선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(고용안정)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계안정 대부로 총 59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(지역경제 활성화) 국비교부사업, 예타신청사업 역시 진행 중이며,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(6.29)하였고,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내로 12월 이전 예정입니다.
- 또한,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 - (자금조달 지원) 협력업체 금융지원 요건을 완화*하고, 특별보증 한도 확대(3억→5억원)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(2.8→2%)도 추진하겠습니다.

* 신·기보 특별보증, 중진공 융자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요구
→ 체납처분유예기업은 4대보험 분할납부승인통보서 등으로 갈음

- (기업부담 완화) 「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*」 임대료율을 인하 ($\Delta 1.6\%$ p)하고,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·사용료 감면과 국가 연구개발 (R&D) 사업 참여부담도 완화** 하겠습니다.

*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매입 → 해당기업에 임대 → 경영상황 회복시 재매입

** 기술료 납부 유예,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, 민간부담비율 완화(33%→20%) 등

- (고용지원)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대상*을 확대하고 고용 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**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* [취업성공패키지] 최종이직 기업이 위기지역內 소재한 경우 → 위기지역內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(최종이직지 무관)

** [고용촉진장려금] 고용부 프로그램 → 지자체 프로그램(고용보험기금 지원)

- (지역경제 활성화) 1,730억원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한 대체·보완 산업 지원과 함께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공동진수시설 기반을 구축(R&D 60억원) 하겠습니다.

- 향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의견 청취·해결과 함께 체계적 지역위기 대응방식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◆ 전력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 (산업부)

- 정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7월 발표된 「여름철 전력수급 대책(7.5, '현안조정회의)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.

- 전력수요 예측결과, 8월 2~3주에도 7월 최대피크(9,248만kW)와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여, 8월 3주까지 공급능력을 1억 73만kW로 확충하고, 예비자원도 681만kW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

- 아울러,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TF를 활용하여 전력수급을 검증·발표토록 하고,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측면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'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,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당분간 일일 점검하는 자세로 관리해 달라'고 당부했습니다.

◆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(중기부)

- 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앞두고 「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」을 논의했습니다.
 -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,
 -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하여 기간연장·규모확대 등을 모색하고,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과제를 발굴,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-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·발표할 계획입니다.